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2011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은 별안간 쓰나미식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남한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그래 왔듯이 대남정책에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지난해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무력도발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철면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언제나 불리하면 도발하고 유리하면 대화공세를 펴는 방식을 되풀이해 왔다.

무력으로 싸우는 군사적 대결보다 말로 싸우는 대화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3대 세습의 안정이라는 내적 논리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과 정세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원래 북한의 전략은 3차 당대표자회 개최 전 중국과 한국에 경제지원과 평화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그것이 아무런 피드백을 가져다주지 않자 군사도발이란 긴장의 에너지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강한 평화공세로 시작된 2011년 남북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또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자신들의 체제전환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낼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단지 외부적 수혈이라는 차원에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공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데서 생존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에서 밀려 내려오는 중국의 시장점령군도 두렵고, 또 남한에서 올라오는 황색바람도 무섭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서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며
 - 가. 신년공동사설
 - 나. 체제 내적 상황
2. 북한의 신년 평화공세 내용
 - 가. 각급 남북대화 재개 공세
 - 나. 대화공세의 절박성과 북한
3. 다각적 평화공세의 목적
 - 가.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목적
 - 나. 경제지원 목적
4. 북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
 - 가. 세습의 논리 집착
 - 나. 경제의 심각한 마비
 - 다. 민심의 이반
5. 북한 체제전환 전망
 - 가. 제도적 체제전환 기대
 - 나. 군부의 힘에 의한 체제 전환
 - 다. 민에 의한 체제전환
6. 끝내며

1. 들어가며

가. 신년공동사설

-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올해의 대남정책 구호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제시함.
 - 2010년의 구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와 유사하지만, 2010년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에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바뀜으로써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성에서 다소 후퇴.
- 2010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요구하는 언급도 많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였으나 올해는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만 제시함.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여전히 강조.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평화공세를 1월 중순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서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남북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실현을 강조함.
 -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을 요구.
- 남한 사회 내에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연북 투쟁의 고취를 촉구한 것은 작년과 동일하나 투쟁 목표는 상이함.
 -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철폐가 목표였으나 올해는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할 것과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저지를 촉구해 저들의 무장도발에 대한 반대급부에 전진공공하는 모습 드러냄.

나. 체제 내적 상황

- 북한은 현재 정치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내적 고갈의 절정에 직면하고 있음.
 - 화폐개혁 이후 이반된 민심은 지난 9월 3차 당대표자회¹⁾ 이후 발표된 3대 세습으로 더욱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좀처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어떤 발표와 지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생계에 급급하면서 체제전환만을 기대하고 있음.
- 김정은의 등장 후 당과 군대 등에서 세대교체란 명분하에 구세대 축출이 단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
 - 3차 당대표자회를 기회로 중앙당으로 도 당책임비서들이 영전한 황해북도(최룡해), 평안북도(김평해), 함경남도(태종수)의 경우, 비서들과 부장들 대부분이 세대 교체되면서 심각한 권력투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와 같은 도 급의 갈등은 마찬가지로 군과 리 단위까지 파급되면서 간부 자리를 놓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모함과 신소로 심화되고 있음.

2. 북한의 신년 평화공세 내용

가. 각급 남북대화 재개 공세

- 북측은 최초 1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동시에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1월말이나 2월 상순 개성에서 열 것을 제의
 - 이에 앞서 북한은 1월 5일 새해 벽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개최 제의.
 - 북한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 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 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통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냄.
 - 이어 1월 12일 통일부 앞으로 총 3통의 통지문을 보내왔는바 그 내용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촉구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이후 자신들이 스스로 동결했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 해옴.

**김정은의 등장 후
당과 군대 등에서
세대교체란 명분하에
구세대 축출이 단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이후
자신들이 스스로
동결했던 개성 남북
경제협력협사무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 해움**

- 특히 12일 통지문의 경우 당국이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성에 어느 정도 성의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됨.
-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20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의 명의로 된 서한을 한국 국방장관 김관진 앞으로 발송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음.
- 이는 우리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화공세에 역제안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됨.
- 즉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나. 대화공세의 절박성과 북한

- 북한은 지난 해 여러 군사적 모험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경제적 여력을 남북대화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긴장이란 새로운 에너지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려는 북한 당국자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기반 위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 노골화.
- 북한 내에서 높아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제적 동력을 확보하는 길은 남쪽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 하에 대화공세 시작.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일지

- 2010년
- 3.26 천안함 침몰사태 발생
- 5.24 정부,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교류 중단 등 5.24조치 발표
- 5.26 북,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 차단 통보
개성공단 통일부 직원 추방
- 7.18 북, 경의선 군 통신선으로 임진강 상류 댐 방류 가능성 통보
- 8.8 북, 동해상에서 ‘대승호’ 나포
- 8.9 북, 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 해안포 130여 발 발사

- 8.11 정부,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대승호 송환 촉구 대북전통문 발송
- 8.13 정부, 5.24 조치 이후 대북민간단체 방북 첫 승인
- 8.25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방북, 미국시민 송환
- 8.26 김정일 중국 방문, 30일 가지 동북 3성 순방
- 8.26 한적, 북한 적십자에 수해복구 지원의사 전달
- 8.31 정부, 한적 명의로 100억 원 상당 수해복구 지원 다시 제의
- 9.4 북 조선적십자회,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해 한적에 수해복구 위한 쌀, 시멘트, 굴착기 지원 요청하는 통지문 전달
- 9.6 북한 적십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해 한적에 대승호 선원 송환 통보
- 9.7 대승호 동해 통해 귀환
- 9.11 북한 중앙통신, 북한적십자회가 이산가족상봉제의 보도
- 9.13 대한적십자사, 13일 수해 지원을 요청해온 북한에 쌀 5천 톤과 시멘트 1만 톤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 전달 발표
- 9.16 북,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
- 9.17 북,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10월 21일에서 27일까지 금강산 지구 내에서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
- 10.25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원으로 처음 마련된 쌀 5천 톤과 칩라면 300만 개 출항
- 10.30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11. 3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 11.11 북,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논의할 당국간 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
- 11.23 북, 연평도 남측 군부대, 민간인 거주 지역 무차별 포격 도발
- 11.28 한미연합훈련 서해상에서 실시
- 12.20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성명 채택 무산, 군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실기
- 북, 유엔 핵 사찰단 복귀 허용과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
- 2011년
- 1.1 북,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 강조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 보임
- 1.5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발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 제의

북한은 지난 해 여러 군사적 모험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경제적 여력을 남북대화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북한은 현재 3대
세습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인 바,
연평도 무력도발 등은
내적 긴장의 필요성에
의해 저지른 도발로
판단됨**

- 1.8 북 조평통, 남북 당국간 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동시에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1월 말이나 2월 상순 개성에서 열 것을 제의
- 1.10 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경제협력협약사무소 동결 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 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통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발송, 우리 정부, “북측의 위장평화공세”라고 일축,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의
- 1.20 북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전격 제의

3. 다각적 평화공세의 목적

가.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목적

-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허약한 체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지난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개전 90일 이내에 미국 5,200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사상자 100만 명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음.
 - 그리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전쟁비용은 1000억 달러, 한국과 주변국은 1조 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 현재 그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 비용은 6조 내지 7조 달러로 추산해야 할 것임.
 - 북한은 군사력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기술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열세에 놓여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권력의 세습기에 북한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바라왔고 북한은 현재 3대 세습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인 바, 연평도 무력도발 등은 내적 긴장의 필요성에 의해 저지른 도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북한 권력세습은 먼저 당에서 이루어지지만 당의 기반이 군대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군부의 권력교체가 우선되고 있는 실정임.

- 3대 세습의 주인공 김정은은 연소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취약점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를 평화유지 상태로 고착시킨 후 경제개혁을 단행해 체제재생산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경제지원 목적

- 북한의 대남전략이 2000년 이후 10여 동안 ‘해방전략’에서 일보 후퇴하여 ‘획득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즉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기반위에서 남쪽의 풍요를 퍼다 북쪽의 빈곤을 채우려는 ‘획득전략’을 대남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수립.
 -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북한의 획득전략은 다시 원위치로 환원되었으나 아직도 남한의 풍부한 경제적 재화는 북에게 군침이 넘어가는 획득의 목표로 되고 있음.
-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현 직전 대남의존도가 너무 높아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남분야에 대한 국방위원회 집중검열을 단행하여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등을 숙청하였으며 대남관계자 상당수를 총살형에 처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2007년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아무런 예고 없이 대남부서들이 자리 잡고 있는 3호 청사에 들이닥쳐 당시 대남관계를 주무하고 있던 통전부 부부장 최승철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일부를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구치소에 감금하여 심문하였음.
 - 결과 최승철의 여자관계 등을 문제 삼아 철직 해임은 물론 북한에 남한의 황색바람을 끌어들였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총살 내지는 숙청하였음.
 - 혹자는 이명박 정부 등장과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 북한이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이 정권 들어서 기 전에 북한은 대남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북한은 체제유지와
재생산에서 세습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에 집착**

4. 북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

가. 세습의 논리 집착

- 북한은 체제유지와 재생산에서 세습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에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북한 경제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으며
개혁과 개방이란
긴급 조치가 없다면
몇 년 안에 침몰할
수밖에 없음**

- 김정일로의 부자세습이 북한 정치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경제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전면에서 “아니 되웁니다”를 말할 수 없는 정치문화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음.
- 최고 엘리트들 대부분이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한심한 실정임.²⁾
- 세습은 정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위로 내려가면서 간부층 대부분이 세습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인민군 대장이며 당 비서인 최룡해는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며 당 검열위원장 김국태는 전 전선사령관 김책의 아들, 또 국방위 오극렬 대장 역시 빨치산 출신 오중성의 아들, 강석주는 김일성의 외척 강석승의 동생임.
- 북한의 간부층을 살펴보면 이조시대 양반계층과 왕권이 결탁하면서 정권 500년을 이어온 것처럼 당 간부와 군 간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음.

나. 경제의 심각한 마비

- 북한 경제는 단지 침체와 저능률이라는 차원을 넘어 마비단계로 들어선지 오래됨.
- 현재 북한 인민경제 가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잉여상품, 재래시장을 통한 장마당경제로 충당하고 있음.
- 2009년 노동당은 상인계층을 겨냥하여 선전포고 형식인 화폐개혁을 선언하였지만 심한 반발에 부딪쳐 내각 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현재 상태로 북한 경제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으며 개혁과 개방이란 긴급 조치가 없다면 몇 년 안에 침몰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음. 북한은 지난 해 중국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8만3천 945t의 쌀을 수입했음.
- 그 외에도 옥수수과 식용유, 설탕, 목화, 버섯 등 식료품까지 수입하고 있으며 대신 오징어 등 연체동물류와 냉동어류를 수출하고 있음.³⁾

다. 민심의 이반

- 북한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3대 세습을 서둘러 진행시켰으나 현재 북한 내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정임.
 - 원래 북한은 김정은이 33세가 되는 2015년에 3대 세습을 단행하려 했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앞당기게 되었음.
 - 김정일도 나이 33세인 1974년 2월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었는바 이는 김일성이 33세인 1945년 귀국하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된 연령적 기준에 의거한 것임.
- 김정일은 사회주의 건설로 마련된 유산으로 그럭저럭 30~40년 북한을 끌어왔지만 이제 김정은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줄 수 없게 되었음.
 - 김정은은 주민들 속에서의 군량미 강탈을 제지하는 등 초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군부가 반발하자 다시 군량미를 공출토록 해 인민들로부터 ‘철부지는 철부지’라는 비난을 사고 있음.

5. 북한 체제전환 전망

가. 제도적 체제전환 기대

- 노동당은 지난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도적 지배의 근간을 복원하였는 바 이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체제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 측면이 혼재함.⁴⁾
 -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는 결국 정치국을 통한 지배이므로 정치국이 김정일 사망 후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김정은에 반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
 - 이미 공산당 지배의 러시아와 몰락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여러 차례 정치국의 역량으로 체제전환을 가져온 사례가 있음.
 - 물론 북한의 경우 김정일 체제에 전면적인 반기를 드는 형식이 아니라 노선변경·정책변경을 이유로 체제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노동당은 지난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도적 지배의 근간을 복원하였는 바 이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체제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 측면이 혼재함

**현재 북한 체제에서
사회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군부가 유일하며 소위
노동계급, 농민계급은
대부분 몰락하거나
상인계층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혼란시대가 이어지고
있음**

나. 군부의 힘에 의한 체제전환

- 현재 북한 체제에서 사회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군부가 유일하며 소위 노동계급, 농민계급은 대부분 몰락하거나 상인계층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혼란시대가 이어지고 있음.
 - 김정일은 이와 같은 군부의 역할을 성찰하고 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으로 권력을 다시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까지 환원된 것은 아님.
 - 한국 사회의 경우 이미 4~50년 전에 국가의 최고 엘리트군이 법조계, 기업, 학계 등으로 이동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여전히 최고 엘리트들은 군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과거 선군정치 15년 동안 군대는 식량공급 등에서 특권을 누려왔지만 이제 노동당은 군대만을 우대할 형편이 아닌 지경에 도달하였음.
 - 3차 당 대표자회에서 지도기관을 개편한 노동당은 나름대로 지배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인계층, 불만계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 결국 노동당은 다시 군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군대는 다시 특권을 발휘하게 되면서 당·군·민의 3각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군이 모든 것을 평정하는 상황 예측.

다. 민에 의한 체제전환

- 가장 낮은 전망이 되겠지만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 그들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음.
 - 현재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에 줄 서지 않고 장마당에 줄 서고 있으며 충성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품으려고 애쓰고 있음.
 - 북한의 장마당과 공공장소에 김정일 부자를 비판하는 삐라가 나붙고 있으며 심지어 벽에 체제비판 구호가 쓰이고 있는 실정임.
- 특수부대 군인 출신들로 <별동대>란 마적단이 조직되고 이들이 사회 불량배 집단과 결탁하여 보안성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노동당 지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임.
 - 특히 김정은 등장 후 군부에서 대좌급 이상 고급군관들이 대거 사회로 방출되면서 체제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특수

부대 출신 군인들이 가세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로 방출된 방대한 군인집단과 일반 주민들이 합세할 경우 식량 폭동 등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최근 사회실정으로, 내적 고갈이 천정을 치고 있음.

6. 끝내며

- 지난 1월 19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와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도발 포기를, 남한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
- 남북관계 발전에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것임. 그러나 북한의 신년 다각적인 평화공세가 반드시 중국의 의중을 담고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그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일 수 있다. 즉 중국에 내민 손이 빈손 일 때 북한은 남한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왔다는 점임.
-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군사실무회담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음. 만약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를 마냥 외면한다면 한반도 정세의 이니셔티브 장악에서 우리가 불리할 것이기 때문임. 또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자신감에 차 있음.
 -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변화임. 북한체제가 순조롭게 변할 때 남북관계도 잘 풀릴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더욱 견고한 독재체제로 간다면 그들의 평화공세는 위장평화공세로 낙인찍힐 것이다. 모두의 바람은 북한의 평화공세가 진정성을 담고 있기를 갈망함.
 - 잦은 대화는 왕래의 길을 넓혀줄 것이고, 물이 흐르다보면 도랑이 생기듯 남북관계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임. 북한의 생산력과 사회통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재가 남북통합에 오히려 긍정적인 일 수 있음. 북한 주민들 다수가 훌륭한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북한체제가 순조롭게
변할 때 남북관계도
잘 풀릴 것이고,
북한의 평화공세가
진정성을 담고 있기를
갈망하는 것임**



- 분단시대 극복에서 대량탈북이니 뭐니 하는 우려는 기우일 수 있음. 이제 탈북자도 어느 정도 넘어왔고 북한에 남아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계층들임. 북한의 재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기우 역시 기우일 수 있음. 통일비용 못지않게 북한에는 막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안찬일

現,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97년 건국대학교에서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탈북자 1호 박사). 국가정보원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초빙교수로 재직하였음.

주석

- 1) 2010년 9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3차 당 대표자회에는 당(673명), 군(451명), 과학, 보건, 문화, 예술(75명), 핵심당원(116명), 여성(149명) 방청(517명) 등 총 1,653명이 참가하였다.
- 2) 과거 1970년대에는 김동규 부주석이 나서 전면 세습을 비판했고 80~90년대에는 연형묵(전 총리)과 같은 대쪽 같은 고위 간부들이 나서 어느 정도 세습정치를 견제하였으나 이제 북한 권부에는 바른 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 3) 지난 해 북한과 중국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액은 총 3억 5천 390만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북한은 8천 99만 8천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쳐 1억 9천 107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VOA, 2011. 1. 15일자.
- 4) 현재 북한 노동당 정치국을 관찰해 보면 항일빨치산 그룹 2세로 김정일과 김국태, 김경희가 있고 만경대 가문 출신으로 양형섭과 이용무가 있다. 결국 정치국원 17명 중 이들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국 후보위원도 마찬가지로 15명 중 최용해와 장성택이 빨치산과 만경대가문 출신이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일반인 출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